

李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조준 “양도세 감면, 점차적 폐지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수위 높아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특혜 지적
“대상군 한정 등 다양한 의견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공급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 반면 다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이번엔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세 감면을 특혜로 지목하고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또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차 안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꾀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행 3년 만인 2020년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예를 들어 1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구윤철 “대미투자 사전검토체계 가동”

고의 지연 등 상대국 오해 방지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앞서 투자후보 물색 등의 사전 검토를 추진한다.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의 고의 지연 아니냐는 상대국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미국 투자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에 있지만, MOU(양해각서)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특별법안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부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이 절차는 입법 전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 및 투자 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또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앞줄 왼쪽부터)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위원장보,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한승수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김정호 신영증권 대표,

이찬진 “증권사, 경제 ‘핵심도관’ 역할 지원”

〈금감원장〉

금감원, 증권사 CEO 간담회

모험자본 공급·PF 정상화 등 주된
증권업계, 자본시장 ‘체질전환’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코스피 5000 시대’ 국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내부통제 강화를 증권업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중소형 증권사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내부통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장과 23개 증권회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새로운 지

평을 열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사실일 상가하며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을 두고 “과거 불안 전파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이 감당했던 불신의 골은 매우 깊었다”며 “상품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수용가능성을 고민하고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언급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증권사는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자본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흐르게 하는 핵심 도관이 되어야 한다”며 “금감원도 적극적인 시도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는 업계 공통 과제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타 권역 대비 여

전히 높다”며 “부실여신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CEO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금감원은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타율과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시스템 정착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은 “증시 호황이 단기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의 ‘체질 전환’이 중요하다”며 “좁은 여항 안에서의 제로섬 경쟁을 넘어 K-자본시장의 지평을 넓히고 규모를 키우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증권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다양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법안지급결제 시스템과 외환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성과급 상한 폐지 등 ‘보상 경쟁’ 본격화

》1면 ‘1억 성과급 산업계’서 계속

일각에서는 이같은 성과급 지급을 두고 기업별로 인재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성과에 따른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인재 확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통해 반도체 인재 유출을 막고 글로벌 핵심 인재를 확보해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신규 채용에서도 이공계 인재 취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즉 인재 확보와 성과급 확대의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수주 절벽으로 장기 불황에 빠지며 대규모 인력 유출사태를 겪은 조선업계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역대 최

대 실적을 달성해 조선계열사에 기본급 대비 최대 100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HD현대삼호는 성과급 상한인 기본급의 1000%, 나머지 HD현대중공업 등 계열사는 800% 전후다.

이는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인재 모시기에 집중하는 것과 연결된다. 과거 숙련공들의 노하우에 의존했던 조선소 현장을 AI와 로봇 중심의 스마트 야드로 탈바꿈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요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기존의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거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명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과태료 부과 절차 돌입... 법 위반 수사 의뢰도

》1면 ‘과기부, 쿠팡 정보유출’서 계속

법 위반 사항으로는 침해사고 신고 지연과 자료보전 명령 위반이 확인됐다. 쿠팡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료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접속기록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자료보전 명

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에 대해 인증체계 검증 강화, 키 관리·통제 체계 정비, 비정상 접속 탐지와 로그 관리 정책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